



전북도는 5일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 2층교육관에서 '2019년 제3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를 열었다.

일본 수출규제 총력 대응

전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 개최... 비상대책반·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전북도는 5일 전주신중앙시장 상인회 2층교육관에서 '2019년 제3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이원택 정부부지사의 주재로 열었다.

이번 회의는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방안과 전북의 지역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주요 경제 정책 공유와 기관 간 협력사항 및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제2차 민생경제 원탁회의의 기관별 협조 요청건에 대해 처리결과와 조치계획으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 동진강 자전거길 순환벨트 조성에 대해 2020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시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항로조설 작기 추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계획수입이 -10.5m로 준설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력 강화에 대해 도에서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공공구매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공공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의 10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4대보험료 지원요청사항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기준,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소상공인 지원정책 반영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회를 가졌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산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지역기업의 현황과 정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전북도의 대응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 모두 한뜻으로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하고 기업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해 신속한 정보공유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 유관기관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 물품을 구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추석맞이 우체국 소포물에 전북 사회적경제 특별관의 제품 구매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국내외 금융전문가가 모이는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개최와 관련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최근 경기불황 및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침체된 도내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대형사업장에 지역업체의 정비 및 자재를 적극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택 정부부지사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반과 기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과 통상거점 확대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효성의 1조원 투자유치 협약을 발판으로 전북을 탄소산업 수도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며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 등 전북형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면서 "도 및 유관 기관·단체가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인 경제기관·단체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펼쳤다. /김진성 기자

사고 없는 추석연휴 위해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는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닷새 간이다. 화재 경계지구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취약요인에 대한 현장점검과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여객터미널·공항·공원묘지 등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전국 1089곳에는 소방차량 1157대와 구조·구급대원 3367명을 전진 배치한

다.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도 확립한다. 소방청은 또 고층집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감지기 설치를 권장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한편 2017~2018년 2년 간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1197건, 구조 3만424건, 구급 7만7288건이었다. /뉴스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통해 미세먼지 잡는다

전북도, 액화천연가스 상용차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추진 순항
상용차특새시장 확대로 침체된 자동차산업 위기극복 발판 마련
경제적 효과 1조7750억원·직·간접 고용효과 1만2천여명 예상

전북도는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우선 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친환경 상용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중대형 상용차 생산거점 지역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우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구지역은 군산시 등에 구축될 예정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등 21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여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의 기회가 제공된다.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창출 사업은 LNG 상용차의 주행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차체의

외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간격을 두고 설치)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통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은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시장형성과 함께 초소형 특수자동차 분야의 선제적 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럽 등에서는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기준에는 없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초소형 기준을 적용해 운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매출 1조7750억원,

직·간접 고용창출 1만2000여명, 도의 기업 25개 이상의 유치 등의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등 침체된 전북의 자동차산업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자동차 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설명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였으며, 법률전문가, 관련분야 전문가(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된 뒤 3차례에 걸친 중기부 점검회의를 진행하여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도는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숙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원활히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대회' 성황리 마쳐

전북도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회의(회장 최운자)에서는 5일 전주 바울교회에서 도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센터장·생활복지사·아동복지교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8만 수고한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이병관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다양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종사자 시상(도지사상, 국회의원장, 도의장상,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상)과 함께 종사자 간의 화합과 정보공유의 장이 되었다.

현재, 전북도에는 14개 시·군에 28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7000여명의 방과 후 아동에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으로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정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온종일 돌봄사업(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센터·방과후아카데미·초등돌봄교실)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종일 돌봄사업 중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서비스에 대표적인 돌봄센터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전북도는 아동이 행복한 환경조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10월 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임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

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임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교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